“潘장관 당선은 〈UN 사무총장〉 한국에 축복”

벨기에紙, 인터뷰 보도

“반기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의 당선은 1991년에서야 유엔에 가입한 한국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이다”

벨기에의 유력지 ‘라 리브르 벨지끄’가 25일(현지시간) 반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반기문이 주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1면과 국제면에 나눠 크게 다루면서 기사 앞머리에 소개한 대목이다. 이 기사는 반 장관의 사무총장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본 필립 파께 국제부 기자가 반 장관을 직접 만나 작성했다.

기사는 반 장관을 “아난 현 총장을 이을 가장 유리한 후보”라고 유엔 가입 15년에 불과한 신생 회원국 출신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점쳤다.

특히 “62세인 한국의 반기문 장관은 유엔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가 회원국 중 젊은 축에 드는 한국 출신이라는 것이 의아할 정도이며, 그는 외교 경력의 중요하고도 많은 부분을 유엔에 헌신했다”고 유엔과의 인연을 부각시켰다. /브뤼셀=연합뉴스

닻 올린 아베號, 강경소장파 전면 배치

관방장관에 시오자키 야스히사 등 우파 일색

‘납치담당보좌관’ 신설 對北압박 강화 예상

일본 제90대 총리에 집권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52) 총재가 26일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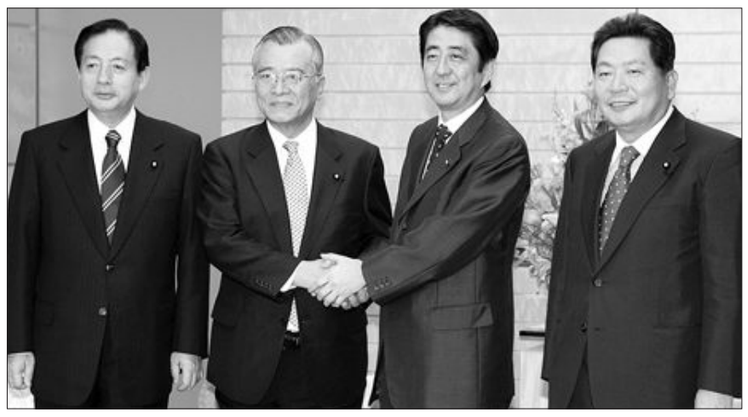
아베 총재는 이날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 총리지명 선거에서 각각 339표와 136표 등 과반인 총 475표를 획득, 251표를 얻는데 그친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64) 대표 등 야당 후보 4명을 누르고 총리에 지명됐다.

신임 아베 총리는 전후 최연소, 최초 전후 태생의 총리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공명당 대표와 만나 ‘연립정권’ 재발족을 합의하는데 이어 일왕의 승인을 거쳐 새로운 내각을 공식 출범한다.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에는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55) 외무성 부대신이 내정됐다. 관방장관은 신설되는 ‘납치문제담당상’을 겸하게 된다. 또 납치문제를 담당하는 총리 보좌관 자리가 신설되는 등 ‘아베 정권’이 ‘납치’를 전면에 내걸어 대북(對北)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총리가 측근 인사에게 대북문제를 맡기고 관련 보좌관을 둔 것은 사실상 이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6일 일본 국회에서 제90대 총리로 선출된 아베 신조(오른쪽에서 두번째) 자민당 총재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 대표와 악수하며 미소짓고 있다. /AFP=연합뉴스

특히 대북문제를 담당하는 공식기구가 사실상 발족한 셈이어서 ‘비밀 특사’를 활용하는 고이즈미 전 총리식 물밑 대북협상의 가능성은 차단될 전망이다. 북·일간 접촉이 한층 공식화되고 그 결과 충돌은 더욱 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제재당할지 모른다고 생각케함으로써 상대를 협상테이블로 부를 수 있다” “북한의 정권 핵심 주변과 당, 군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함으로써 정권을 쓰러뜨리는 결정타까지는 되지 않아도 화학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아베 총리의 이런 과거 발언은 이미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발사 직후 북한 화물선 입항금지와 지난 19일 대북 금융제재로 현실화했다. 아베 정권은 금융제재의 조직화를 위해 ‘대북 금융제재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소 다로(麻生太郎·66) 외상은 외상에 유임될 가능성이 높으며 내각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내각에는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경제재정상과 아베 장관의 선거대책본부 사무국장을 맡았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57) 전 노동상, 아베 지지 모임인 ‘재도전 지원의원 연맹’ 회장인 야마모토 유지(山本有二·54) 의원 등 측근 인사의 입각이 확실시된다.

또 연립 공명당 몫으로 후유시바 데쓰죠(冬柴鐵三·70) 간사장이 국토교통상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권의 주요과제를 특별담당하는 ‘금융·재도전’ ‘납치문제’ ‘국가·지방 행정·세제개혁. 도주제 등’ ‘오키나와·북방, 저출산, 이노베이션 등’ ‘경제재정’ 등 5개 특명담당상을 신설한다. /도쿄=연합뉴스

中 ‘16년 권세’ 상하이幇 몰락하나

황태자격 천량위 서기 해임 이어 조사 확대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 등장 이후 10여년간 중국 정가와 경제계에서 활약해온 상하이방(上海幇)이 천량위(陳良宇) 상하이 서기의 전격 해임과 함께 몰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간이성(干以勝) 상무위원은 26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사가 계속되면 관련자들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상하이의 시 정부와 공산당 내 연금유용사건의 파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만의 한 언론은 정치국의 또 다른 위원과 가족들이 이번 부패사건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공보 등 홍콩 언론들은 이날 상하이의 고위직들이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 특수경찰이 배치되고, 고위직들의 여권이 압수됐다고 보도했다.

상하이방이 중국의 당·정 전권을 장악한 것은 16년 전. 1989년 상하이시 서기를 맡고 있던 장쩌민은 6·4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자오쯔양(趙紫陽)이 실각한 직후 덩샤오핑(鄧小平)의 발탁으로 전격 공산당 총서기직에 임명됐다.

당시 상하이 부서기였던 쩡칭훙(曾慶紅)만이 장쩌민을 따라 중앙으로 갔으나 치열한 권력장악 과정을 통해 2002년 장쩌민이 퇴임했을 때엔 상하이방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 포진하며 중국을 주무르는 최대 계파가 됐다.

상하이방은 이후 중국 정치의 실세로서 정치 이념보다는 경제에 중점을 두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개발 계획을 추진했다. 대부분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획, 협상 능력이나 외국어 실력이 뛰어났던 이들은 실제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홍콩=연합뉴스

“美, 한반도 등 유사시 투입 육군 부족”

뉴욕타임스, 예비병력 1만여명 불과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미 육군 전력의 상당부분이 묶이면서 한반도 등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발발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미 육군 전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잇따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2일에 이어 25일에도 군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라크와 아프간에 너무 많은 병력이 파견됐거나 최근 귀국한 상태여서 병력과 장비 면에서 예상치 못한 국제 분쟁에 대응능력을 완전히 갖춘 육군 정규병력이 2-3개 전투여단에 7천명에서 1만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육군이 1년 해외근무에 2년 본국근무 체제를 구상하고 있으나 이라크와 아프간 병력 수요 확대로 인해 1년 해외근무에 1년 본국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같은 상황이 다른 비상사태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수를 크게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라크전 수행과 자연재해 대응, 한반도 유사시 대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3 보병사단의 경우, 잦은 이라크 배치로 인해 장비와 병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지난 2003년에 이어 2005년 다시 이라크에 배치됐다 지난 1월 조지아주 본대로 돌아온 제3 보병사단은 산하 4개 여단 가운데 1개 여단을 또다시 이라크로 파병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담배 ‘라이트’ 문구는 소비자 기만 행위”

美 법원, 흡연자 집단 손배소 가능

미국 연방법원은 25일 수 천 만 명의 ‘라이트 담배’ 흡연 피해자들에게 최대 2천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의 잭 와인스타인 판사는 필립 모리스 등 미국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2004년 제기된 한 소송의 판결에서 1970년대 초 이후 시판된 ‘라이트(light)’ 또는 ‘라이츠(lights)’ 표기 담배를 구입한 사람은 누구나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바버라 슈워브씨 등 8명의 라이트 담배 흡연피해자들은 2004년 미국 담배회사들이 ‘라이트’라는 문구를 이용, 소비자들을 상대로 기만적인 광고를 함으로써 연방법률을 위반해 피해를 야기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른바 ‘슈워브 사건’으로 불리는 이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담배회사들이 ‘라이트’라는 문구를 이용해 얻은 이득이 1천200억~2천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전액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카지노 딜레마

홍 행 기
사회2부 차장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는 요즘 ‘카지노 딜레마’에 빠져있다. 각종 용역 보고서마다 카지노 없이는 J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세상을 뒤흔든 사행성 오락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당분간 카지노의 ‘카’자도 꺼내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래선지 최근 전남도가 내 놓고 있는 J프로젝트 관련 각종 발표에서는 카지노가 쏙 빠진 대신,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덜했던 ‘F1 자동차경주대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J프로젝트가 성공하는데 있어서 F1대회는 필요조건이고 카지노는 ‘필요충분’조건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남도의 고민은 크다. ‘J프로젝트 용역 중간보고’의 관광객 수요 추정을 보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 전체 숙박여행객 443만3천명 가운데 카지노 숙박여행객을 77%인 342만2천명으로 잡고있다.

또 2, 3단계 사업이 완성되는 2016년 카지노 수익은 7천647억원으로, 전체 관광수익 8천619억원의 89%를 차지한다. 반면 F1대회의 예상수익은 고작 33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전경련이 지난 13일 발표한 ‘J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에서, J프로젝트 전체 대상부지 3천만평 가운데 자신들이 개발하는 500만평 안에 카지노 콤플렉스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도 카지노만한 수익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카지노 없는 J프로젝트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현재의 여건으로는 카지노를 유치하기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같은 현실을 놓고, 뒤늦은 지적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남도가 J프로젝트 초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카지노 문제를 지나치게 쉽게 생각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J프로젝트 전체의 수익성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미흡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그러나 그같은 비판이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와서 J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갖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J프로젝트가 ‘가난하게 살아 온’ 전남의 운명을 바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카지노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설득력있는 논리와 실현 가능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지 않거나, 불가능하다면 이제라도 계획을 수정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여기저기 눈치를 보다 시기를 놓치면 J프로젝트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redplane@kwangju.co.kr